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

중기중앙회, 공정위가 징수한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 中소 지원 위해 써야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취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날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정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기업 보호하려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해기업의 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기업의 재산상 손해는 장기간 방치되어 파산 위기에 처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징수를 통해 가해기업의 부담이득을 환수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기금으로 조성해 피해기업의 손해를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이황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과징금에 기반한 기금 활용은 중소기업이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와 같이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요건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일각의 피해기금 신설 시 안정적 재원 조달 우려와 관련하여 "과징금 액수가 크면 재원조달에 문제

가 없을 것이고, 반대로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해 과징금이 줄어들면 구제해출 업체가 줄어 재원 부족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피해기금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거래단절을 감수한 채 대형로펌을 앞세운 대기업과 맞서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이 장기화되어 파산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설립을 통해 사전에 안전망을 구축하여 피해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사장님의 절세 전략'으로 손꼽히는 노란우산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중기중앙회, 5월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노란우산 가입 권장

중소기업중앙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사장님의 절세 전략'으로 손꼽히는 노란우산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마련 제도로 폐업, 노령 및 재난 등 사장님들이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제 제도이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매년 납부한 총 부금액 중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절세 효과는 최소 39만원에서 최대 154만원까지 예상된다. 절세 효과에 민감한 사장님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평소보다 50% 이상 노란우산에 더 많이 가입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월 평균 노란우산 가입자수는 약 2만명이지만 5월 한 달 동안에만 약 3만명씩 가입했다. 2025년 4월말 기준 노란우산 누적 가입자수는 305만명, 재적인원은 179만명이다.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이미 선택한 노란우산은 사업비를 때지 않고 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목돈마련' 제도로 거듭나고 있다.

/오상근기자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中소 · 국회 · 정부 · 학계 논의장 열려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일 중기중앙회 KRX홀에서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주제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된 중소기업 주간의 첫날 행사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에서 꼭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는 내수침체와 고령화,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운송비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경제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

심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지방노후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차기정부에 바라는 정책들을 제안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산업은 변화하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제조업의 부흥, 양극화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



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상병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배영숙 파초 대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오동운 동아대 교수 △구인혁 숙명여대 교수 △노민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오상근기자

농촌진흥청, 논 재배용 사료피 신제품 '조온' · '다운' 개발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논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국산 풀사료 신제품 '조온'과 '다운'을 개발하고, 전라·전북·충청·경북·경남 및 실증시험을 통해 현장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 개발은 정부의 논 전라·전북·충청·경북·경남 및 실증시험을 통해 현장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신제품 '조온'은 생육 기간이 짧은 조기 수확형 품종으로, 쓰러짐에 강한 특성(내도복성)이 있다. 기상이변 등으로 주 작물을 수확하지 못할 경우나, 단기간 생산이 필요할 때 긴급조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건물(마른풀)수량은 헥타르당 8.4톤

으로 식용피 대비 약 12만원의 수익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운'은 수확량이 많은 품종(다수성)으로 진한 자주색 이삭이 나온다. 제주 재래종 대비 약 8% 높은 수량성(16.9톤/헥타르)을 보였고, 헥타르당 14만원 이상 수익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료피는 습한 논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건조나 담근택이(사일리지)로 만들어 가축에게 급여할 수 있다. 따라서 여름철 풀사료 생산에 효율적인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실증 재배 사업을 통해 생산성과 재배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다. 2026년부터는 민간 종자 업체와 협력해 종자 생산 및 농가 보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상근기자

차기 대통령 '경제성장 견인능력' 갖춰야

중기중앙회, 대통령에 바란다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 실시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제조업·비제조업) 604개사를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기업 4곳 중 3곳(75.7%)이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능력·조건으로 '경제성장 견인능력'을 꼽아, 경제분야에서의 능력을 대통령 자질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기 대통령이 가져가야 할 국정 방향으로는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48.0%)이 가장 높았으며,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45.7%),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극복'(36.6%), '기업혁신과 규제 완화'(24.5%), '수도권과 지역 불균형 완화'(1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이 중점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에서는 '청년고용 지원'(4.07점), △성장동력 확보에서는 '금융지원 확대, 벤처투자 활성화'(3.82점), △경제생태계 순환에서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산업 육성, 인력, 금융지원'(4.08점)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는 '성장'(31.3%), '공정'(24.0%), '일관성'(17.7%), '혁신'(17.5%), '분배'(9.4%)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차기 대통령이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침체된 경제상황을 빠르게 회복시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